

의붓딸 살해 사건 “경찰 노력 전무”

인권위, 경찰청·광주청·목포서 개선권고

“피해자보호관 전문성 강화 등 개선해야”

보건복지부·법무부에도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숨진 10대 여중생의 생전 성범죄 신고에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숨진 10대 가 학대를 당해온 가운데 피해를 신고 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청을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실 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선 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보호관 전문성 강화 방안, 학대에경찰청이 사례 관 리를 할 수 있는 개선안, 사건 이송 지 연 또는 피해자 보호 관할 논란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또 사건 관련 목포경찰서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조치, 광주경찰 청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학대 아동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정 보 공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 고했다.

법무부에도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붓 아버지, 친인척 등과 같이 아동과 일정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의한 학대 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 치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 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숨진 12세 A양 친 부는 지난 4월9일 딸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했다. A양은 같은 달 9일과 12일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A양에 대한 목포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4월9일 경찰이 A양을 약 40분 조사하 는 동안 친부가 약 29분 자리를 비웠 음에도 조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또 해바라기센터에 A양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진술분석전문가를 조사 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부족했다고 봤다.

A양은 또 4월14일 해바라기센터에 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

했다. 경찰은 이 신변보호 요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4월15일 A양은 경찰에 다 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같은 날 오후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 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반복했다고 한다.

그 뒤로 A양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사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신변보호 요청 에 관한 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A양이 취소 의사를 밝혔더라도 친부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했다가 반복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 불안감이 해소됐는지 여부, 신변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정 등에 대해 친부에게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목포서가 사건을 전

남경찰청에 보내려 했는데 관할을 이 유로 반려됐고 사건은 4월16일 광주 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청은 19일 사건서류를 전달받아 23일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광주청은 같은 달 24일과 25 일 A양 친부와 접촉을 했고 ‘A양 휴 대전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잘 관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3일 뒤인 4월28일 A양은 시신으로 발견됐 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인권위는 “신고 이후 사망까지 약 18일 동안 목 포경찰서와 광주경찰청은 피해 아동 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는 고려 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언급했 다. 또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 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 피해 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 해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 사건이 광주청으로 이송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 고 접수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가 진행 되지 않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야 임진처리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고, 피해자조사, 신변 보호 요청, 이송, 수사 등 일련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소홀, 지연, 부작 위 등이 존재하고 A양을 보살피는 노 려가 거의 없었던 부분이 피해자 보호 에 공백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고 설 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2세 A양 친모 유모(39)씨와 의부 김모(31)씨를 살 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6시30분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 워둔 차량에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 구의 한 저수지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양은 김씨에게 성범죄 를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 는데, 이후 1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기관은 김씨 와 유씨가 A양의 신고 사실을 알고 범 행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 정에서 A양이 숨지기 전 목포경찰서 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던 사건이 광주경찰청으로 넘어 가는 등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아베 규탄대학생 평화행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성 없는 아베 규탄, 전쟁종식 평화선 언, 분단적폐 청산 7.20 대학생 평화행진'에 참여한 학생들이 아베 총리 규탄 구호를 외치 며 행진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 1회용 식기 사용 논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1회 용 품 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선수촌 등지의 매끼 식사에 100% 1회용 식기류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접시와 국그릇은 종이, 숟가락과 포 크·나이프는 플라스틱,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진 1회 용품을 사용 중이 라는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17일 동안 매일 5만 8000인분을 6개 식기류(접시·포크 등)에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59 만1600개의 1회 용품이 배출되는 셈 이라고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 광주 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더 많은 선수가 참가했지만, 공동 식

기류를 문체없이 사용했다”며 “위생 명분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선수촌 관계자는 개초 당시 “식기 세척 위생 문제로 모든 국제대회가 일 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 식기류이 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은홍 기자

“잔소리에 격분”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영장

경찰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부턴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긴 급체포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 사이(추정) 광주 북구 모 아 파트에서 어머니 B(72)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B씨와 다부턴 뒤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다투다. 화기에 폭행했지만, 살해 의 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인이 드러나는데도 보강 조사 뒤 존속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장 에서 수구·다이빙 종목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된 일본인 A(37·현재 출국금지 상태)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경 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촬영한 혐의다.

또 지난 14일 오전 11시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 로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2분2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씨의 동영상 파일은 151개였으며, 이중 20개(15분36초 분량)가 불법 촬영 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0만 원을 선납받았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며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리했다.

동료 뺨 때리고 식당서 행패 부린 경찰관 영장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잇단 행패를 부린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관공서·식당·술집에 서 자주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 대 소속 A(53) 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손님들과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불협조적인 지구대에서도 소동을 부 린 혐의다.

A 경위는 지난달 여수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뒤 뺨을 때리고, 3차례에 걸쳐 구례지역 식당·술집에서 소란을 피 운 혐의도 받는다.

임형택 기자

중학교 후배 감금·협박한 10대들 검거

후배가 금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들이 검 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갈 등)로 A(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도로에서 자신들이 발린 차량에 후배 B(14)군을 태운 뒤 1시간30분동안 데리고 다니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B군이 현금 180만원을 주지 않자며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 등은 돈을 빼앗기 위해 B군이 잃어버리지도 않은 금목걸이를 분실한 것처럼 꾸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과 B군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일명 ‘호구잡기 놀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일행 중 2명은 현재 다른 범죄로 소년원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